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의
New 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

담당자 : 김남근 변호사 (010-2253-5834)

일시 : 2024.2.28.(수)

**젊은 민주당 영입인재들,
“윤석열 정부가 축소하고 중단한 R&D 예산과 RE100
정책을 회복하겠다”**

- 위기에 처한 연구현장을 위해 “R&D예산 조기 집행과 추경편성으로 위기 극복” 제안
- R&D 예산의 즉흥적인 감축을 방지하는 입법을 통해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
- 지역 RE100 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에너지 정책을 위해 민주당 내 “미래성장위원회” 신설

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R&D예산 축소와 RE100 정책 중단을 비판하고 22대 국회에서 R&D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활동 계획을 밝힌다.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당 영입인재들의 “New 민주당 정책제안”의 두 번째 순서로 천문연구원 출신 황정아 예비후보 (유성구을), 박지혜 변호사,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 차지호 KAIST 교수가 윤석열 정부가 축소하고 중단한 R&D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안을 제시한다. 과학고등학교, KAIST를 거쳐서 천문연구원에 재직했던 황정아 박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기후싱크 탱크 플랜 1.5 전 공동대표 박지혜 변호사, 동아대 의대를 나와 국제보건의료 및 미래 혁신 전문가인 차지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해서 한국의 미래를 위한 R&D 정책과 기후에너지정책에 대한 구상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황정아 유성구를 예비후보는 “올해 R&D예산이 4조 6천억원이나 감축되는 바람에 젊은 연구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그동안 해오던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어려워져서 연구현장을 떠나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10여년 넘게 연구해 온 연구자를 잃는 것은 국가에 큰 타격이다”라며 R&D 예산의 시급한 복원을 강조했다. “필수 R&D 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2024년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 사전계획없는 R&D예산 감축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 ▲ 정부출연 연구기관 PBS제도 개선 ▲ 지역 자율 R&D예산 확보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 기관 해제에 따른 국가 R&D 혁신 방안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선언했다”며 RE100은 기업 생존의 필요조건으로 정착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축소와 태양광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감사로 인해 국내의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국제 추세와는 반대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RE100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특별법 추진 등을 제안했다. 공영운 전 사장 역시 “국내 기업들이 RE100 거래조건을 위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RE100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포항, 부산, 울산, 창원, 여수, 광주, 새만금, 당진, 평택, 강원, 인천 등 전국 각 지역의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RE100 산단으로 전환하고 입주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차지호 교수는 “민주당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혁신을 강조했다. 민주당 혁신위원을 역임했던 차 교수는 “민주당이 R&D, RE100, 전기차,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르는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해외의 관련 산업과 정책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대응 정책과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미래성장위원회’를 민주당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9일 목요일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는 류삼영 전 총경, 박선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이용우 변호사,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참여하는 권력기관 개혁과제에 대한 3차 정책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끝)

〈참고자료〉

“New 민주당 정책제안” 일정

	일시 및 장소	주제	참석자 (영입인재)
1차	2.26.(월) 10:00 국회소통관	혁신성장 개혁과제 ① :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김남근, 공영운, 김남희, 임광현, 이용우, 이훈기, 박지혜
2차	2.28.(수) 10:00 국회소통관	혁신성장 개혁과제 ② : R&D와 RE100	황정아, 박지혜, 공영운, 신용한, 박선원, 김남근, 백승아, 차지호
3차	2.29.(목) 11:20 국회소통관	권력기관 개혁과제	류삼영, 박선원, 이용우, 임광현, 정한중, 김남근
4차	3.5(화) 09:20 국회소통관	교육·노동·복지 분야 개혁과제	김남희, 백승아, 이용우, 김남근, 전은수

New 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 ②

윤석열 정부가 축소중단한 'R&D 예산'과 'RE100 정책'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제안

“New 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 2차에서는 과학기술 분야를 대변하여 영입된 황정아 박사와 기후위기와 에너지정책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 “미래혁신” 분야 전문가인 차지호 교수 등이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중단된 ‘R&D 예산’과 ‘RE100 정책’ 회복에 관한 정책제안을 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R&D 예산을 4조 6천억 원이나 급작스레 삭감함에 따라 전국의 연구개발 현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주체인 과학기술계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의 대기업들이나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다국적기업으로부터 “RE100 조건부 거래” 압박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선언하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공급정책을 축소·중단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해외공장을 구축한 대기업들은 해당 국가에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와 인증서 매입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국내에서 국가적 차원의 재생에너지 공급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과학기술과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정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재정건전성”의 도그마에만 갇혀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독재 정권하에서 행정체제도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는” 관료주의 행정으로 변질되면서, 재정감축 지시에 R&D 예산마저 예산 삭감이 미칠 과학기술과 산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한 대규모 삭감이 추진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재생에너지 정책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의 도그마에 갇혀 기후위기에 대비한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의 규범화, 확산 등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재생에너지 공급정책을 축소

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하는 기업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2024 R&D 재정은 조기집행과 시급한 추경편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2025 R&D 예산안’ 편성에서는 사전계획 없는 R&D 예산 감축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R&D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RE 100” 정책에 있어서도 정권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과 함께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특별법, 재생에너지 공급이 수월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RE100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근시안적 과학기술과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민주당 내에 “미래성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1. 혁신성장을 위한 R&D 예산과 정책 정상화

1) 2024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감축된 R&D 예산 복구와 조기 집행

현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4조 6천억원이나 급작스레 삭감함에 따라 전국의 연구개발 현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던 젊은 연구원들이 현장을 떠나거나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또한 이렇게 현장 연구진뿐 아니라,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예비 연구원들과 박사후 연구원들은 급작스런 연구비 삭감으로 연구의 진행뿐 아니라 생계에까지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임. 예산은 나중에 되돌릴 수 있어도 사람을 되돌리기는 힘들고, 두뇌가 없어진 R&D는 두고두고 국가에 피해를 줄 것임. 이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까지 1년의 공백 기간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책이 단행돼야 함.

이러한 급작스런 예산 삭감은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주체인 과학기술계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과 반대되는 행태라 할 수 있음. 전 세계적인 대전환 시대에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2024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즉각적으로 R&D 예산을 복원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필수 연구개발 사업 중단 방지, 연구개발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올해 R&D 예산의 상반기 내 조기집행을 요구함. 올해 1년 총 R&D 예산 중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하여, 우선적으로 6월 말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이에 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로 하여금 국가 전체 R&D 정상 유지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 실시를 촉

구할 것을 제안함.

2) R&D 예산의 전면 복구 및 대폭 확대를 위한 ‘2025 R&D 예산안’ 편성과 함께 사전계획 없는 R&D 예산 감축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

향후 국가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R&D 예산에 대해 사전 계획과 근거 없이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개정 혹은 신규법안 제정 등을 통해 행정부의 직권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3)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PBS 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출연연 연구자들이 다수의 단기 연구 과제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단기간에 보장할 수 있는 성과 생산과 국가 R&D 과제에서 요구하는 성공기준 충족에만 매몰되고 있음. 이는 필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도전적 연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음.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기술 및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연구자들의 인건비를 과제가 아닌 확정적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연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연구자들의 동기부여 및 우수 인재 유입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적 연구 도전을 장려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출연연의 혁신성과 제고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4) ‘지역 자율 R&D 예산’ 확보

현재 중앙정부 주도의 R&D 예산 체계를 개선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지역 대학 연구개발(R&D)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는 거점 지역 연구소 구축 및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함. 또한, 지방 이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R&D)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민·관·학 공동협력 인재 육성 체계 구축을 제안함.

2. 여야 협치를 통해 국가 R&D 혁신 방안 마련

급작스런 R&D 예산 삭감의 문제성과는 별개로, 국가 R&D의 혁신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그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추격형 R&D를 통해 양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선진

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왔음.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왔고,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음.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의 경제성장과는 다른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서 녹색 기술과 디지털 기술, 우주항공 기술 등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R&D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적 R&D 예산 확대뿐 아니라 혁신성 제고를 위해서도 여야 협치를 기반으로 R&D 거버넌스 및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이러한 R&D 혁신 방안은 정부출연 연구원의 공공기관 해체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원의 역할 강화 및 기능 제고 방안 등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RE 100” 구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특별법 추진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으로 상징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기업 생존의 필요조건으로 부상하고 있음. 구글, 애플 등 구매 다국적기업으로부터 “RE 100 조건부 거래” 압박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 사용(RE 100)“을 선언함.

게다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상대방이나 그 공급망에 있는 기업의 환경, 인권 영향 등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거래 축소, 거래 중단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공급망 실사법”, 금융기관이 투자대상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FDR)”, 기업활동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영향 등의 비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 등 기후공시 의무화가 주요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어,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하여 강화된 의무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지난 한 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는 855조 원으로 원전 투자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났음. RE100 확산 등 세계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주요 제조기업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확대되고 있음. 일례로 2040

년까지 RE100 달성을 선언한 TSMC를 위해 대만 정부는 해상풍력 인허가 확대와 접속료 인하 조치를 통해 적극 지원함.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축소하였으며(30.2%→21.6%),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축소하는 한편, 광범위한 수사와 감사 등을 통해 사실상 ‘태양광 죽이기’에 나서고 있어, 역대급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태양광 신규 설치 물량이 2년 연속 감소한 상황임.

따라서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조달에 나서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 다국적 대기업은 그나마 해외 공장을 중심으로 RE 100을 실현하고, 국내에서는 녹색 프리미엄 구입 등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나,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중소기업은 아예 이러한 조치에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임.

1) 후퇴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원상 복구

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이루어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 세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늘려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개시하자는 데 최종 합의함. 이와 같은 국제적 합의를 감안하더라도 2024년 상반기중 수립될 제11차 전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원상복구해야 할 것임.

2)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특별법 제정

RE100 이행을 지원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보급 정책이 필요함. 지붕태양광·영농형 태양광·수상태양광 촉진, 신속한 해상풍력 발전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제도의 개선, 공공건물, 철도, 도로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허가 제도 간소화, 이익 공유 및 주민참여 제도화, 입지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을 제안함.

3) 재생에너지 설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도입

RE100 이행 수단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의 녹색 프리미엄 의존이 뚜렷함. 기업이 스스로 재생에너지 설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설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원할 것을 제안함.

4. 시대에 역행하는 ‘메가 서울’ 정책을 폐기하고 ‘지역 RE100 클러스터’ 정책 채택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혁신과 글로벌 감각이 필요함. 따라서 태양광과 풍력, 조력, 청정수소 등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맞추어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러한 에너지 원천이 있는 곳에 혁신 제조업을 결합시켜야 함.

수출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찾아 다녀야 하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 2.항의 제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들이 거래 상대방인 한국 기업들에게 “RE100 조건부” 거래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국제적인 “RE100 거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 기업은 재생 에너지를 찾아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들이 재생에너지 공급원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기 전에, 지방의 주요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국내에서 대안을 제공하고 지역 RE100 클러스터에 합류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함.

또한, 포항, 부산, 울산, 창원, 여수, 광주, 새만금, 당진, 평택, 강원권 등 지역의 각 산업거점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우선 결합해 지방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전환하는 것에서 출발할 것을 제안함.

재생에너지 공급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수도권의 경우에도 인천 등에 현지 여건에 맞는 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통해 RE100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등 수도권 기업들에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RE100을 중심으로 한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뿐만 아니라 이들 RE100 클러스터에 교육과 문화 인프라를 접목시켜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키울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와 같은 민생 문제 해결도 모도할 수 있을 것임.

5. 민주당이 미래 혁신성장에 핵심적인 의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당내에 미래 성장위원회 설치


민주당이 R&D 예산과 정책, 재생에너지 공급(RE 100), 전기차, AI 등 미래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르는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해외의 관련 산업과 정책의 동향 등

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대응 정책과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미래성장 위원회’를 제안함.

22대 국회에서의 과학기술 발전과 기후위기와 에너지정책, 혁신성장 등 분야에서의 의정활동을 위해 영입되는 황정아 박사, 공영운 사장, 이재성 대표, 박지혜 변호사, 차지호 교수 등은 이러한 “미래성장”, “미래혁신”과 관련한 전문성과 관련 학자,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어서 이들이 미래성장위원회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록 2] 참여 영입인재 프로필

영입 순번	사진	이름 (연령)	주요 프로필	출생지
1		박지혜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스웨덴 룬드대학교 석사/ 서울대 법대 박사 - (사)플랜.5 공동대표 - 前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경기 연천
4		박선원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청와대 통일외교비서관 - 前 국정원 제1차장 - 연세대 경영학 / 영국 워릭대 박사 	전남 나주
6		황정아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 - 카이스트 물리학 / 카이스트 박사 	전남 여수
9		공영운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현대자동차 사장 - 前 문화일보 기자 - 서울대 경영학 	경남 산청
10		김남근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민변 부회장 - 前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서울대 법대 / 고려대 박사 	서울 중구
12		백승아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 - 초등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 - 원주 봉대초 교사 - 춘천교대 	충북 제천
15		신용한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청주 生 - 연대 경영학,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 前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장관급) - 前 서원대학교 석좌교수 	충북 청원군 (현 청주시)

영입 순번	사진	이름 (연령)	주요 프로필	출생지
25		차지호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이스트 교수 - 前 민주당 혁신위원 - 동아대 의대 / 존스홉킨스 대 박사 	부산 남구